

제공일자	2009. 5. 14	담당자	유경원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3775-9020	총 2 매

제목 :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가계 재무건전성 제고 전략 마련이 시급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및 부채분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유경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유는 소득이 뒷받침 되거나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보다는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일시적인 경기 충격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신규 부채의 증가보다는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일부 가구의 경우 부채가 한번 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가계부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Survey of Consumer Finance*와 같이 가계의 자산, 부채 및 소득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시 통계자료의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가계부문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득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가, 자산가격 변화에 민감한 중·고소득계층의 경우 **자산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제기하고 있다. 저소득 일부 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자산 축적도 미흡한 만큼 이들 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이들 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의 동태적 분석 결과 가계가 일단 부채를 지기 시작하면 부채감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약 계층의 경우 가계부채 접근가능성 제고보다는 **금융자산의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경우 소득증가가 금융자산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 계층의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저축증대에 제한이 되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에 대한 절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장기 주택금융의 발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자산보유 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결국 가계의 적정 수준의 부채보유와 금융자산 축적의 전제조건임을 제기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